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 제안

민주 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간담회

장애인 '표현의 자유'
보장 가능환경 구축
저상버스 슬로프
고장률 정기 점검
망가진 보도블록 등
개선·보완체제 마련 등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듣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주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동근숲'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해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주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정책제안자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과 열악한 사회환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과 보완상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주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동근숲'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이 사회가 장애·비장애에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누구나 공평하고 편안하게 누려야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우리는 어떤 시선을 보고 받아드려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승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증진법 사각지대 100인 미만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의 접근성 문제에 따른 노후된 건물 보완과 이동식 경사로 활용 활성화 지원 정책 제안 ▲장애인으로 나선 흥진 사회복지사는 보행환경에 관한 주제로 제안했다.

흥진 사회복지사는 ▲모두가 보행하는 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자를

사로가 없는 상가, 지동문이 없는 건물을 대한 정화한 실태조사 및 개선·보완체제 마련, ▲보행환경에 관련한 문제를 '환경 조성의 문제'이자 '공동'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한 활동가는 ▲저상버스 슬로프 고장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동식·전자동식 슬로프 안전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저상버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보완 ▲노후된 버스, 정류장 교체 및 보완 ▲교통약자 탑승 전광판 위치 확보와 정류장 내 스크린 높이 조절 법규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교육 법규화 정책을 제안했다.

세 번째 정책 제안으로 나선 흥진 사회복지사는 보행환경에 관한 주제로 제안했다.

흥진 사회복지사는 ▲모두가 보행하는 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자를 루이 없는 인도 망가진 보도블록, 경

사로가 없는 상가, 지동문이 없는 건물을 대한 정화한 실태조사 및 개선·보완체제 마련, ▲보행환경에 관련한 문제를 '환경 조성의 문제'이자 '공동'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 모인 전주 시민들은 작은 것부터 변화하는 유니버설 도시 구축을 위한 벌리지 사업 실행에 대한 권유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자자체나 공공기관은 신규 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구입토록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의무화를 장애인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공공처리시설 설치 토지 사용 규정 근거 마련

민주 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관리·이용 개정법안 등 대표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후 별도의 고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등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한편,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제출했다.

/유호상 기자

정읍 발전 위해 이재명에 압도적 지지 보내야"

민주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오늘 3월 9일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90% 이상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지지를 목표로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지난 12일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지역 선대위원회 80% 필승 결의대회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대위 결의대회의 명칭을 '80% 필승 결의대회'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읍·고창지역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9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거 캠페인을 전진지휘하며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24일, 당 정읍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지역 선대위원회로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표하고도 하겠다는 결의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읍·고창지역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읍·고창지역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9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거 캠페인을 전진지휘하며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번 대선은 정읍 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왕이면 압도적 투표율과 득표율로 지지를 보내 대선 기여도가 높아야 정읍을 위한 정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고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투표율 80%와 득표율 90%의 목표를 초과달성이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주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축분뇨에너지 사업화 문제, 벼 병충해 문제, 농산물 수급조절 문제, 밀·콩 자급률 문제, 공익직불금 제도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쌀 값 인정을 위한 시장격리 요구 등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윤덕 의원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현재 기초수급 정도에 그치고 있는 지원을 스스로 지원을 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원진한 사회참여를 위해 지역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인구 유출 막아야"

민주 김윤덕 의원, 지역대학 발전 관련

앞서 치매극복 간담회 열고 예방책 논의



지난 21일 열린 치매극복 간담회.

(사진=김윤덕 의원실 제공)

김윤덕(전주갑)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24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역대학 발전을 통한 지역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50%까지 상향하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이어, "전북의 청소년, 청년의 인구 유출이 지역대학 위기와 무관치 않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대학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 종장협의회 연합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지방대학 살리기 5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는 청원문을 발표한 이유도 지방소멸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018년 18%로 시작해 법으로 규정한 30%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채용 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이미 저도 지켜지 않고 있다"며 "제가 이전 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채용에 대해 이전 지역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 추가 채용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지역대학, 지역정치권과 합심해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3대가 같이 사는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과 기업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졸업 후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며 "여러 요소들을

/유호상 기자

"경기장·대한방식 용도 통합 조정 제3의 개발 바람직"

임정엽 전 완주군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식 부지 개발과 관련해 용도를 통합해 재배치하는 방식의 제3의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임 전 군수는

24일

전주시장

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요구, 전주 발전, 기업의 존속여부 세 가지 원칙 아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합경기장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 유통시설, 대형면적 터의 상업용도와 관광시설이 중복된 문제점이 있다며 용도를 통합 조정해 새로운 개발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군수는

또

전주

에서

제3의 개발방안

을

제시

했다.

임 전 군수는

전주

에서

제3의

개발

방식

을

제3의</p